

입법정책브리핑

Legislation & Policy Briefing

제2022-9호

발행일: 2022. 12. 2. (금)

제400회 국회(정기회, 2022. 9. 1. ~ 2022. 12. 9.)

법무법인(유) 지평 공공정책팀은 (사)지평법정책연구소와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의 정책적 배경과 관련 법정정책 자료를 전달하는 입법정책브리핑을 발간합니다. 입법정책브리핑은 입법과 정책을 통합적 관점에서 고찰함으로써 법이 현실에서 살아 움직이고 정책이 헌법과 법치주의에 기반하여 구현되는 데에 기여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입니다.

목 차

1. 개관

2. 주요 법정정책 이슈

가. 사회적 약자 지원 및 보호

나. 동물보호 및 관리 강화

다.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 별도의 인용표기가 없는 인용문과 그림 및 도표의 출처는 링크된 원문입니다.

법무법인(유) 지평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고객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지평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적 효력을 지닌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법인(유) 지평의 변호사 및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십시오.

1. 개관

제400회 국회(정기회)는 9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100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지난 11월 24일 개최된 제13차 본회의에서 27건의 법률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제400회 국회 제13차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안으로는 (1) 빛 대물림 방지를 위해 특별한정승인 특례를 신설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 동물원·수족관·야생동물카페 등 전시되고 있는 동물들에 대한 보호 및 관리를 강화하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3)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야생동물의 이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사기죄를 범한 교수가 직위를 유지하여 대학원생 등 학생들이 계속적으로 위험에 처하거나 학생들의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습니다.

제400회 국회의 2022년 11월 24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27건의 법률안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 후 시행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1	법제사법위원회(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 의원 등 11인
4	교육위원회(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위원장
5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 의원 등 10인
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 의원 등 11인
7	국방위원회(1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방위원장
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방위원장
9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방위원장

	소관 상임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1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1)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방위원장	
11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방위원장	
12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 의원 등 12인	
13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현 의원 등 12인	
1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 의원 등 11인	
1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 의원 등 11인	
16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 의원 등 11인	
17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의원 등 10인	
18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 의원 등 11인	
19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 의원 등 17인	
20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 의원 등 17인	
21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3		환경노동위원회(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24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25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6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7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이번 호에서는 여러 중요한 법안 가운데 법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사회적 약자 지원 및 보호, 동물보호 및 관리 강화,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이슈를 다룹니다.

2. 주요 법정책 이슈

가. 사회적 약자 지원 및 보호

개요

사회적 약자는 신체 또는 인지 기능이 다른 사람보다 약한 사람을 포함하여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측면에서 일반 주류 구성원들에게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차별을 받거나 받는다고 느끼는 집단을 아울러 이르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어린이, 외국인노동자 등을 사회적 약자로 봅니다. 정부(법무부)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을 위해 힘쓰면서 특히,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지원 방안 마련 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최근 통과된 법률안 중에서 이와 관련한 입법들이 눈에 띕니다.

2022년 11월 24일 본회의에서는 미성년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를 전부 승계하여 상속채무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감호위탁 시 가정폭력 피해자와 가해자가 동일한 시설에서 생활하게 되는 현행법의 문제를 해소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통과되었습니다.

입법 동향

	소관 상임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1	법제사법위원회	<p>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p> <p>현행법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3개월의 법정기간을 적극적인 선택 없이 경과하면 단순승인으로 의제하되,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위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를 구제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미성년자 상속인의 경우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이 상속을 단순승인하거나 특별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더라도 미성년자 상속인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를 전부 승계하여 상속채무에서 벗어날 수 없고 성년이 된 후에도 정</p>	2022-11-24 (원안가결)

	소관 상임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상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되는 문제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에도 미성년자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는 경우의 미성년자 상속인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별도의 입법조치가 바람직하다는 다수의견이 있었음. 이에 상속개시 당시 미성년자인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상속을 단순승인을 하였다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성년이 된 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특별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미성년자 상속인의 자기결정권 및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2	법제사법위원회	<p>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p> <p>가정폭력범죄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이고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은 사회적으로 여전히 일상적이고 가벼운 다툼 혹은 가족 간의 일 정도로 취급되는 측면이 있어 가정폭력범죄가 반복되고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의 위협에 노출되고 있는 바, 가정폭력에 대한 수사기관 및 사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필요로 하는 상황임. 이에 가정폭력과 관련한 처벌을 강화하고 사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흡한 점을 보완·개선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가정폭력 반복의 차단 및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p>	2022-11-24 (수정가결)

정책 동향

[120대 국정과제] 63.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법무부·여가부·금융위)

과제목표

권력형 성범죄, 아동학대범죄, 흉악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근절하여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사회 실현

홍포화되는 소년범죄, 주취범죄, 무고·위증·사기 등 거짓말범죄, 불법 사금융 등 서민 대상 경제범죄를 엄단하고 피해자 보호 강화

주요 내용

(권력형 성범죄 근절 및 아동학대 방지 전방위 시스템 구축)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법안 입법 지원 및 양형기준 강화, 아동학대 원스톱 대응 시스템 구축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을 확실하게 보호) 부처별로 분산된 범죄예방 환경 개선 사업을 체계적으로 총괄·

[120대 국정과제] 64.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 (법무부·방통위·여가부)

과제목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모든 제도를 피해자 중심으로 전환

주요 내용

(원스톱 범죄피해자 솔루션 시스템 구축) 부처별로 분산된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총괄·관리하여 연계 강화, 신변 보호부터 법률 지원·경제적 지원·일상회복까지 종합적으로 '원스톱' 서비스 지원

(강력범죄 피해자를 위한 치유지원 강화) 원스톱 범죄피해자 솔루션 시스템과 연동하여 부처별로 분산된 심리치유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통합·관리, 비대면 상담이 가능한 온라인 프로그램 구축 등 지원 강화

관리, 최첨단 전자장치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감
독제 운영, 중형선고와 결합한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제 추진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및 주취범죄 엄정대
응) 국제인권기준 등을 고려하여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화, 소년범을 위한 통합가정법원 설
치 지원, 해외 입법례 등을 참조하여 주취감경 폐
지 검토

(무고·위증·사기 등 거짓말범죄 피해자 특별 구
제책 마련) 범죄 유형에 따른 무고죄 법정형 구분
검토 및 무고 등 적발 강화, 위증죄 법정형 개선 검
토, 디지털플랫폼 이용 신종 사기 적극 대응 및 피
해자 구제 강화

(서민·소상공인 올리는 경제범죄 엄단) 부처 간
협업으로 자본시장 교란사범 및 가상자산 관련 사
범 엄단, 범죄수익 철저 환수, 불법사금융·보이
스피싱 등에 대해 부처 합동으로 엄정 대응, 피해
방지, 피해자 지원 추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혀질 권리 보장)
불법촬영물 삭제를 위한 법무부·방통위·여
가부 등 협업 강화,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재
발급 등 행정 차원의 신변보호 강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맞춤형 증거보전 제도 마
련) 현재 결정 및 해외 입법례 등을 참조하여 증
거보전 법제화 추진, 아동·청소년 친화적인 수
사 및 재판시스템 구축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사회적 취약계
층 우선 지원) 산재된 법률구조 기구들을 총괄·
관리하여 연계 강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혜택
이 집중될 수 있도록 법률구조 서비스의 대상
및 범위 재조정

(5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디지털성범
죄 피해자 지원센터 및 해바라기센터 등 전문성
강화, 신고부터 피해회복까지 5대 폭력(권력형
성범죄,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
토킹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2022 새정부 부처 업무보고(법무부, 2022. 7. 26.)





출처: [2022 새정부 부처 업무보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특집페이지

참고 자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21. 2.
전주혜 의원안: 보호사건 처리 및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의 제외사유 규정 등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 등

[특별한정승인에 있어 미성년 상속인의 보호](#) 부산고등법원 부산판례연구회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 방안: 청주 여중생 투신 사망사건이 남긴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2022. 6. 8.

성범죄 피해를 입은 두 명의 여중생이 함께 투신자살한 ‘청주 오창 여중생 사망사건’이 발생한지 일 년이 지났고, 여중생 한 명의 계부였던 가해자에게는 중형이 선고되었다. 친족 성폭력 피해를 사회에 알리는 용기를 낸 이들이 결국 죽음으로 고통을 끝내는 불행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세심한 보호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이 글은 계부로부터 성학대 피해를 입은 피해 청소년이 끝내 분리되지 못했던 입법 공백에 주목하였다.

[미성년 상속인 보호 입법 방안](#) 국회입법조사처 「NARS 현안분석」 2021. 4. 29.

■ 현행 「민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상속재산보다 많은 채무를 남긴 상황에서 미성년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그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 하지 않은 경우, 미성년 상속인은 그 초과상속채무를 승계받게 됨

- 대법원은 미성년 상속인이 초과상속채무를 승계받은 경우 성인이 된 이후에도 그 상속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는 기존의 해석을 유지하는 한편, 입법론으로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한 미성년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함

■ 주요 외국에서는 특별규정 등을 통해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채무가 미성년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는 미성년 상속인을 보호하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으며, 미국, 영국에서는 구조적으로 초과상속채무가 모든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미성년 상속인이 초과상속채무를 승계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입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구체적으로는 기존의 상속법 체계(당연승계주의, 단순승인의제 등)와의 정합성을 갖추고, 미성년 상속인과 상속채권자(피상속인의 채권자)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반영하며, 기존 제도와 비교할 때 미성년자의 상속을 처리하는 데 과도한 비용적·절차적 부담을 야기하지 않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요구됨

[친족성폭력 청소년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2018. 4. 26.

이 글에서는 친족성폭력 피해자의 친권관련 피해 사안을 살펴보고, 관련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나. 동물보호 및 관리 강화

개요

동물원은 생물다양성 보전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서 대중에게 동물원과 야생에서 동물이 직면하는 위협에 관해 관심을 갖고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보유동물에 대한 적절하고 안전한 환경 제공 및 동물의 복지증진을 위해 힘쓸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자연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집행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전시 및 야생동물의 보호와 적절하고 안전한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노력이 엿보입니다. 이는 지난 입법정책브리핑 제2022-2호에서 다룬 동물보호복지제도 이슈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입니다.

2022년 11월 24일 본회의에서는 동물원·수족관 보유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고 질병 및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과 동물 전시·체험 시설의 무분별한 전시를 방지하고 야생동물 유래 질병, 생태계와 동물복지에 대한 위협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입법 동향

	소관 상임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1	환경노동위원회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동물원·수족관의 등록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현행법의 제정·시행('16년~) 이후 동물원·수족관이 국가 관리체계로 편입되었으나, 현행 규정상 동물원 및 수족관은 등록기준 충족만으로 설립이 가능하여 사람과 동물의 질병·안전관리에 취약하며,	2022-11-24 (원안가결)

	환경노동위원회	<p>상업적 목적에 치중한 일부 소규모 동물원·수족관의 운영·관리상 문제도 지속 제기되고 있음. 또한,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휴원 이후 보유동물 방치 문제, 돌고래 등 동물원·수족관 보유동물 폐사와 같은 일련의 사례로 인하여 동물원·수족관 보유동물의 복지 및 관리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더욱 높아지고 있지만, 현행법은 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동물원·수족관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면서 동물원·수족관의 허가 기준을 강화하고, 동물 이동전시 금지 등을 통한 동물복지 제고 및 질병·안전 관리 강화 등 전반적인 동물원·수족관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p>	
2		<p>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p> <p>기존의 관리 대상이 아닌 야생동물을 분류군별로 관리 대상으로 추가하고, 분류군별로 수입·양도·양수·보관 등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야생동물을 생산, 수입, 판매 등을 하는 영업자에 대한 허가 규정을 신설하여 야생동물의 복지 증진뿐만 아니라 국내 생태계 보호, 질병 관리를 통한 국민 보건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또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 외의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행위를 금지하고, 야생동물 전시행위 금지 등으로 인하여 유기 또는 방치될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해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야생동물에 대한 보호·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p>	2022-11-24 (원안가결)

정책 동향

[120대 국정과제] 87. 기후위기에 강한 물 환경과 자연 생태계 조성 (환경부)

과제목표

모두에게 안전하고 스마트한 새로운 물 서비스 제공, 자연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통해 기후재해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주요내용

(안전한 스마트 물 관리) 홍수·가뭄 등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깨끗한 물 관리

- 인공지능(AI) 홍수 예보('25년), 댐·하천 디지털트윈 구현('26년) 등 스마트기술 기반의 물 재해 예보·대응체계 구현
- 국가·지방하천 예방투자 확대로 재해에 대한 국가 책임 이행 강화

(물 서비스 품질 제고) 물 서비스 고품질화 및 지역 간 격차 해소

- 지역 맞춤형 수도사업자 통합('23~), 낙동강 취수원다변화 추진('22~) 등으로 지역 간 먹는 물 서비스 균등화
- 치수·생태·문화·관광이 어우러진 명품하천 조성('22~), 물 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환경시설 현대화) 노후화된 물 관리시설(상·하수도, 다목적댐) 정비 및 현대화로 국민안전과 경제 활성화 동시 달성

(생물다양성 보전) 생태공간 확충, 야생생물 관리 강화로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

- 생물다양성 우수지역의 보전 활동 지원 확대(생태계서비스지불제 등), 유희지, 훼손지 등 생태복원으로 생활 속 생태녹지 확충(~'26)
- 야생동물 검역 시행('24~), 곰 사육 종식(~'25), 야생동물 질병관리 현장 대응 강화 등으로 동물 공존 기반 강화

(기후위기 감시·예측) AI, 빅데이터 등 기반 기후변화 및 위험기상 예측 첨단기술을 개발하고 국민체감형·재생에너지 맞춤형 기상정보 제공

제4차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21 ~ '25)

III. 야생생물 보호 비전 및 목표

1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

비전 야생생물과 국민이 공존하는 건강한 한반도

목표 야생생물 위협요인을 저감하는 보호·관리 체계 정착

- 보호지역 확대 : '20년 16.8% → '25년 20%
- 상시 예찰 야생동물 질병 확대 : '20년 2개 → '25년 25개
- 유입주의 생물 지정 확대 : '20년 300종 → '25년 1,000종

추진 전략	① 야생생물 보호 및 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생생물종 조사·활용체계 선진화 •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 및 보전 체계화 • 국제적멸종위기종 보호·관리 강화 • 야생동물 질병관리 체계 강화
	② 야생생물 서식지 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생생물 서식지 보전 및 복원체계 마련 • 한반도 생태 네트워크 보전·복원 확대 • 기후변화 대응 야생생물 보호 • LMO 안전관리 강화
	③ 공존기반 선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유입 야생동물 관리기반 마련 • 외래생물 관리기반 확충 • 야생동물 사고 예방과 구조·치료 체계 강화 • 유해동물 관리기반 확충 • 밀렵, 밀거래, 수렵제도 정비
	④ 보호·관리 기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생생물 보호·관리 체계 및 제도 정비 • 야생생물 보호 교육·홍보 강화 • 야생생물 보호 대내외 협력 강화

출처: 제4차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2021~2025) 환경부 2020. 12. 28.

+

제1차 동물원 관리 종합계획('21 ~ '25)

Ⅲ 제1차 동물원 관리 종합계획('21-'25) 추진방향

비전

사람과 동물 모두가 행복한 동물원

목표

- 동물원 동물복지 구현 및 보건·안전 확보
- 생물다양성 보전·연구 동반기관으로 육성

5대 전략

전략별 중점 추진과제

1. 동물 복지 및 서식환경 개선

- ①-1. 동물원 설립기준 강화
- ①-2. 전시·사육동물 서식·관리 기준 마련
- ①-3. 동물복지 및 서식환경 관리·평가

2. 안전 및 공중보건 확보

- ②-1. 질병·공중보건 관리 체계 구축
- ②-2. 안전관리 체계 구축
- ②-3. 미등록 야생동물 전시시설 관리 강화

3. 생물다양성 보전·연구 기반 구축

- ③-1. 국내 멸종위기종 보전·증식 연구 촉진
- ③-2. 동물이력관리 표준정보시스템 구축
- ③-3. 동물원 서식지외 보전기관 역할 강화

4.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및 교육·홍보 강화

- ④-1. 외래 전시동물 증식·도입 협력 프로그램 구축
- ④-2. 동물원 생물다양성 연구 거버넌스 기능 확충

5. 동물원 운영·관리 선진화 기반 마련

- ⑤-1. 권역별 거점동물원 구축·운영
- ⑤-2. 동물원 운영·관리 지원 체계 구축

출처: 제1차 동물원 관리 종합계획(2021-2025) 환경부 2020. 12. 17.

참고 자료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상헌 의원안: 소규모 동물원에 대한 관리규정 마련](#) 2020. 9.

[박상혁 의원안: 서식환경·질병관리 기준 구체화 및 동물 체험행사 금지](#) 2020. 11.

[강은미 의원안: 동물원·수족관 허가제 도입 및 동물체험 등 금지](#) 2020. 11.

[맹성규 의원안: 휴·폐원 시 보유 생물의 유·무상 양도 규정 등](#) 2020. 11.

[한준애 의원안: 동물원·수족관의 허가제 도입 및 동물체험금지 등](#) 2020. 11.

[노웅래 의원안: 동물원·수족관의 동물 공연 등 금지](#) 2020. 11.

[한준호 의원안: 동물원·수족관 보유 동물의 이동전시 금지](#) 2021. 6.

[노웅래 의원안: 동물원·수족관의 관리체계 강화](#) 2021. 9.

[윤미향 의원안: 동물원·수족관의 허가제 도입 및 동물체험금지 등](#) 2022. 5.

[정청래 의원안: 동물원·수족관 등록제의 허가제 전환](#) 2020. 11.

[이헌승 의원안: 적절한 서식환경 기준의 위임 근거 및 과태료 규정 마련](#) 2020. 9.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양이원영 의원안: 지정관리 야생동물 관리 체계 및 야생동물 영업 허가제의 도입](#) 2021. 3.

[노웅래 의원안: 야생동물의 이동전시 금지 및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근거 마련](#) 2021. 9.

[동물원수족관법 및 야생생물법 개정에 관한 입법공청회 자료](#) 대한민국 국회 누리집

[동물원 전시동물 교육체험 프로그램 매뉴얼](#) 환경부 누리집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자료](#) 사단법인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AWARE) 자료실

[환경 파괴로 늘어나는 전염병 현황 및 대응 방안](#)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2020. 4. 7.

박쥐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야생동물을 통해 인간에게 전파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다. 최근 기후변화와 생태계 파괴 등으로 야생동물과의 접촉이 늘어나고 있어, 환경파괴가 전염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환경정책의 사각지대를 살펴보고, 환경파괴로 인한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국내 환경정책 과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해외사례를 통해 본 동물원 관리제도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2013. 9. 4.

이 글에서는 동물원 관련 국내·외 법률 현황을 살펴보고 동물원에 대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개요

정부는 미래세대 장병들이 만족할 수 있는 병영환경을 조성하고, 장병들의 전투임무 수행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의식주 등 장병 생활여건 개선을 최우선적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병 선호를 고려한 메뉴편성 등 급식 질의 획기적인 개선 추진 ▲장병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병영생활관 기준 인원 변경(2~4인실 기준), 침구 등 전면 교체 ▲고위험·고난도 임무를 수행하는 장병

들의 안전한 임무 수행을 위해 경량방탄헬멧 등 개인 전투장구류의 조기 보급 등을 추진합니다. 한편, 국회도 장병의 기본적인 생활여건 보장에 관한 입법을 통해 장병 기대 수준에 맞는 의식주 개선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는 입법정책브리핑 제2022-3호에서 다룬 군 장병 인권 보호 이슈와도 맥락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2022년 11월 24일 본회의에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의무복무하는 장병들에게 양질의 생활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통과되었습니다.

입법 동향

	소관 상임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1	국방위원회	<p>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p> <p>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를 부여하면서,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부실급식 사태에서 보듯이 여러 국가 정책적인 목적을 위해 군 장병들의 기본적인 의식주에 사용되어야 하는 물품의 조달을 제한하고 있어 장병의 기본적인 생활여건 보장과 충돌하는 측면이 있음. 중소기업 육성 등 국가 정책은 필요한 부분이나 이는 별도의 정책을 통해 추진되어야 할 부분으로, 장병들의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의 질을 저하시켜는 방법으로 추진되어서는 안됨. 이는 국가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장병들을 위한 책무를 다 한다고 볼 수 없으며, 헌법에서 규정한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에도 반한다고 볼 수 있음. 이에 법에 국가가 장병의 생활여건 보장을 위하여 의식주와 관련된 물품을 조달할 때는 여타 국가 정책적 목적보다는 장병 복지를 최우선 목적에 두고 조달 및 보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의무복무하는 장병들에게 양질의 생활여건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p>	2022-11-24 (원안가결)

정책 동향

[120대 국정과제] 107.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및 장병 정신전력 강화 (국방부)

과제목표

의·식·주 등 장병 생활여건 개선 및 군 특성을 반영한 의료시스템 구축
장병들의 학업 연속성 보장 및 자기계발 기회 확대, 생산적 복무여건 조성 등을 통해 군 복무기간을 생산적 활동기로 전환
산재해 있는 군사시설을 통폐합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최소화하여 지역 주민과 군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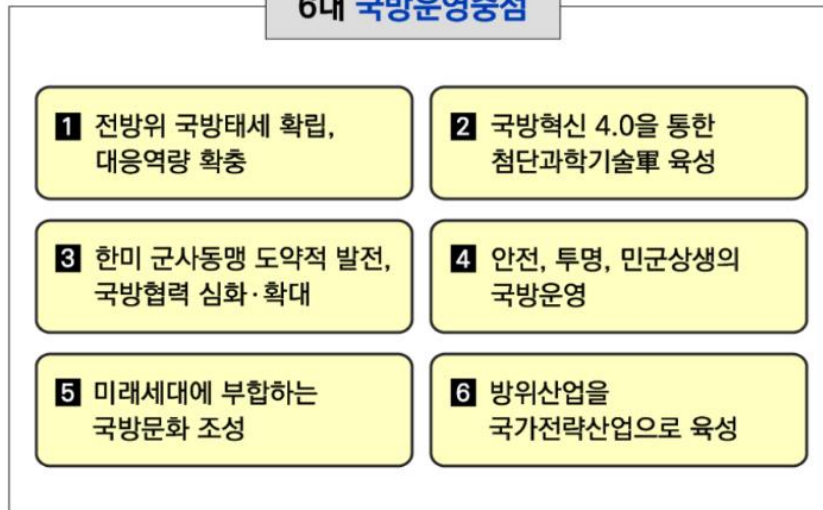
(의·식·주 개선) 장병 만족도를 획기적으로 향상할 수 있도록 의·식·주 개선

- 군 피복류 조달제도 개선 및 기능 강화를 통한 고품질 피복류 보급 확대
- 미래세대 전투식량 개발 및 선택형 급식체계로 개선

- 병영생활관의 생활실을 2~4인 거주로 개선
 - 전투생존성 보강 차원에서 개인 전투 장구류 개선 추진(무전기·방탄복·야시장비, 생존성 향상 피복류, 전투기능 발휘 보장을 위한 장구류 전력화 추진 등)
- (군 의료체계 개선) 원격진료 확대, 응급후송체계 구축 및 국군외상 센터 단계적 확대운영
(병영생활 개선)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 휴가 산정 방법 개선, 입영 대상자의 선호가 고려된 입영계획 수립을 통해 입영 대기기간 최소화
(비전투 분야 업무의 민간 아웃소싱 확대) 단순업무 민간 아웃소싱을 확대하고, 복무기간 중 자기 계발 기회를 확대하여 청년 맞춤형 병영문화 조성
(장병 정신전력 강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임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국방백서 등에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정신전력 극대화 추진
(국민권익 보호) 산재한 군사시설을 통합하고, 필수지역을 제외한 군사 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는 등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민군상생 도모

미래세대에 부합하는 국방문화 조성 (국방부)

6대 국방운영중점



1.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 대응역량 확충	2. 국방혁신 4.0을 통한 첨단과학기술군 육성	3. 한미 군사동맹 도약적 발전, 국방협력 심화·확대	4. 안전, 투명, 민군상생의 국방운영	5. 미래세대에 부합하는 국방문화 조성	6. 방위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	----------------------------	-------------------------------	-----------------------	-----------------------	----------------------

MZ세대의 기대수준에 부합토록 **군 복무환경을 개선**해 나가면서,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상체계 강화**

주요 추진과제

- 장병 기대 수준에 맞는 의식주 개선
-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예우 및 보상 강화
- 사회변화를 반영한 복무환경 개선
- 비전투분야 업무 민간 아웃소싱 확대
- 군 인권보호체계 강화

출처: [국방부 6대 국방운영중점](#) 국방부 누리집

참고 자료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국방위원회 2022. 8.

김병주 의원안: 장병의 복지를 우선 고려한 급식, 피복 등의 물품구매

[2022 새정부 부처 업무보고\(국방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특집페이지

[병사 복지 증진을 위한 제언](#) 한국국방연구원 「국방논단」 2022. 2. 25.

최근 병사 봉급의 인상과 사회복귀지원금 지원, 향후 봉급의 연차적 인상 계획 등 경제적 복지가 확대되면서, 군 내외 병사 복지에 대한 그 동안의 요구가 일부분 충족되고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그럼에도 최근의 급식 문제를 대표해 사소한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현재 병사 복지의 실태와 향후 정책 대응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 몇 년 간 병사 복지 증진을 위한 경제적 지원과 더불어 생활관 개선, 급식·피복 개선, 의료 지원 확대, 문화·여가 지원 등 다양한 제도 개선과 비용 지원이 이루어져 왔음에도 각 부문별 병사 인식과 만족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크게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향후 병사 복지 발전을 위한 정책적 방향으로, 병사 복지 분야별 포괄적·체계적 정책 추진 체계의 구축, 분야별 복지 실현 목표와 보상 규모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법정부적 차원의 제도 검토 및 지원, 병사의 기본적 권리 보장이 가능한 정책 목표 수립 및 민간 역량 활용, 병사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복지서비스 제공 방안 강구 등을 제시하였다.

[군 급식의 질적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 민간위탁 운영 확대 논의를 중심으로 -](#)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2021. 7. 8.

최근 코로나19 격리장병에게 제공된 부실 급식 논란을 계기로 정부는 부실 급식의 재발 방지 및 근본적 해결을 위하여 급식비 인상, 장병 선호 식단 반영을 위한 식재료 구매방식 개선, 조리인력 확충 등을 추진키로 하였다. 아울러, 군 급식의 민간위탁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정부 대책은 부실 급식 문제를 일정부분 해소하여 군 복무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간위탁 확대의 경우 국지전 발생 시 민간 위험 가능성 등 여러 제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사)지평법정책연구소 · 법무법인(유) 지평 공공정책팀



이공현 명예대표변호사
(지평법정책연구소 이사장)
02-6200-1770
leekh@jipyong.com



임성택 대표변호사
02-6200-1746
stlim@jipyong.com



윤영규 변호사
02-6200-1743
ykyun@jipyong.com



김진권 변호사
02-6200-1812
jkkim@jipyong.com



민창욱 변호사
02-6200-1841
cwmin@jipyong.com



이춘희 선임연구원
(지평법정책연구소)
02-6200-0628
chy@jipyong.com

지평법정책연구소 · 지평 공공정책팀 입법정책브리핑의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간단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설문조사 참여 링크](#)).